

구속영장으로 살펴본 신정아 4가지 혐의

예일대 박사학위 증명·확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업무방해·공무 방해 적시 4가지 혐의 인정맨 최고 7년 6개월 징역형

서울 서부지검이 18일 청구한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에는 일단 광주비엔날레 재단과 동국대 재단이 고소·고발한 4가지 혐의가 적시됐다.

이 4가지 혐의는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2005년 8월께 동국대 교원 임용을 앞두고 미국 캔자스대의 학·석사 및 예일대 박사 학위증명서, 예일대 대학원 부원장 명의의 확인서 등 위조 서류를 만들었다.

신씨가 실제로 학위를 받지 않았는데도 해당 대학 당국 관계자의 명의로 허위 서류를 만든 것은 형법 제231조의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한다. 신씨는 2005년 8~9월께 특례 형식으로 진행된 동국대 전임 교원모집에 응하면서 이런 위조 서류를 동국대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형법 제234조의 위조 사문서 행사죄가 적용됐다.

또 신씨는 자격 미달자이면서도 학력을 사칭해 학교법인 동국대학교의 전임 교원 모집에 응함으로써 정상적 교원 임용이 이뤄지지 않도록 했다. 이는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신씨가 이런 거짓 이력을 바탕으로 올해 7월 광주비엔날레예술감독 모집에 지원해 예술감독으로 내정된 데 대해서는 형법 제137조에 규정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이런 혐의 내용은 광주비엔날레와 학

교법인 동국대학교의 고소 내용과 기본적으로 똑같은 것이다.

광주비엔날레는 7월 18일 위계(僞計)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신씨를 광주지검에 고발했고 동국대는 7월 23일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등 혐의로 신씨를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으며, 서울서부지검은 9월 초부터 이 두 사건을 병합해 수사해 왔다.

검찰은 일단 구속영장에 적시된 4가지 혐의로 신씨를 구속한 뒤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학내외 유력 인사와 관련된 신씨의 전방위 로비 의혹 등에 대한 수사도 벌일 예정이다.

검찰은 또 신씨가 성곡미술관에 근무하면서 각종 지원금 등을 빼돌렸다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신씨에 대한 처벌 수위도 관심을 모은다. 검찰이 적용한 모든 혐의가 인정될 경우를 가정한다면 이론적으로는 7년 6월 이하 징역 또는 2천250만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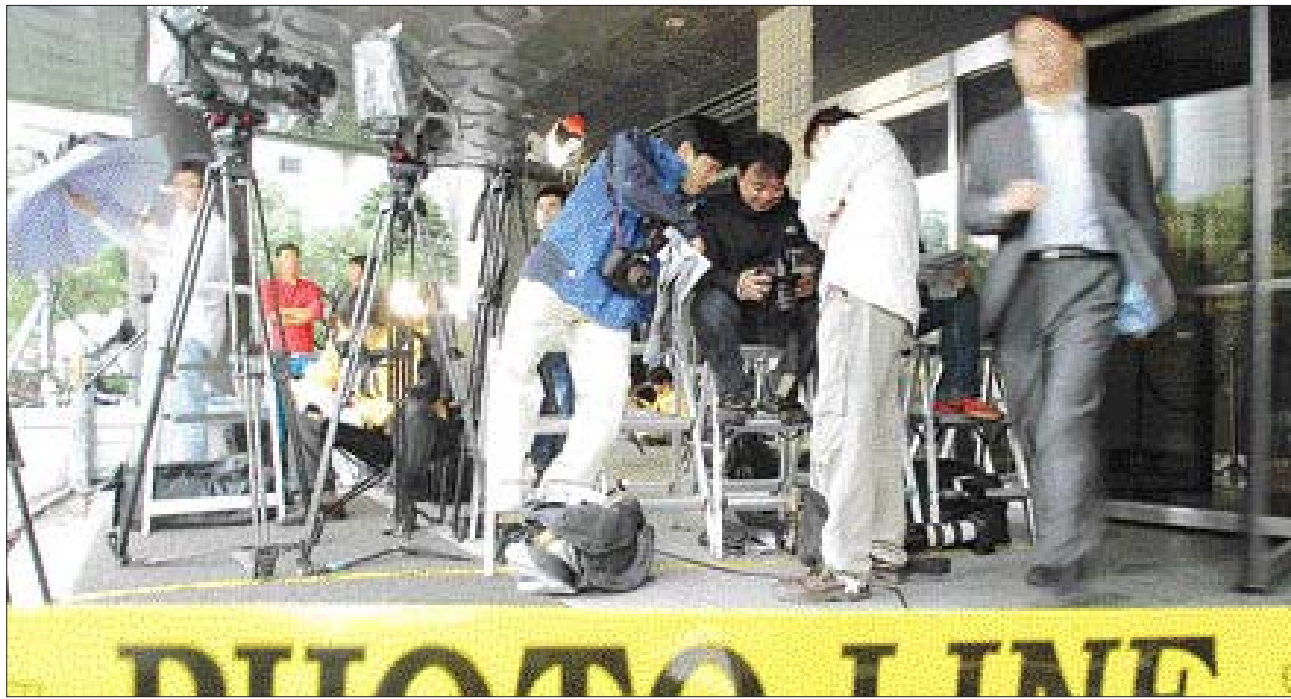
형법상 형을 선고할 때(사형 또는 무기

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같은 종류 형벌인 경우)는 여러 죄 중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죄에 적용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가중주의'가 적용된다.

신씨의 혐의 중 형이 가장 무거운 범죄는 업무방해로서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이를 '가중주의'에 따라 경합범 처벌할 경우 7년6월 이하 징역 또는 2천25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지만 '가짜 학위'로 교수까지 됐다는 점 등 죄질이 나빠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연합뉴스



학력위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신정아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18일 오후 서울서부지검 입구에 취재진들이 포토라인을 치고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속 이미 각오... 언론 노출 피하기

■ 신씨 실질심사 왜 포기했나

학력위조 혐의 등으로 18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가 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신문)를 포기한 이유는 뭘까.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자신의 혐의사실을 강하게 부인해 온 신씨가 검찰의 강제수사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버렸다는 점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변호인측은 영장실질심사 포기 사유에

대해 "검찰에서 충분히 주장한 내용을 법정에서까지 되풀이하는 것을 신씨가 꺼려 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어렵다.

신씨가 '인신구속'이라는 개인사적 중대 문제를 놓고 수사 및 사법기관에서의 반복된 신문에 피로를 느껴 실질심사를 받지 않기로 했다는 설명은 상식과 맞지 않는다. 이런 의문점을 놓고 신씨가 사실상 검찰의 강도높은 수사를 겪은 뒤 구속을 각오하고 자포자기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우선 나온다.

신씨가 '마지막 자존심'을 세우려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는 있지만 자신의 행적에 비해 구속영장이 발부될 만한 사유를 갖겠다는 생각을 스스로 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실제 신씨는 그간 자신의 학력 등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해 왔고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측 변호인과 자신의 변호인이 수사에 공동대응하고 있다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는 점에서 구속 사유인 진술변복과 말뭉치기 등 '증거인멸 우려'가 농후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

다. 아울러 자발적으로 귀국한 게 사실이라도 수사기간 중 해외로 잠적한 바 있다는 점은 또 다른 구속사유인 도주우려에 부합되는 정황이 될 수 있다.

신씨가 "법정에서까지 주장을 되풀이 하기 싫다"는 취지로 실질심사 포기 사유를 표명했던 점에 비추어 더 이상 언론에 노출되는 일을 피하기 위한 의도에서 실질심사를 포기했다는 분석도 있다.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학력위조 등 자신의 혐의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충분히 갖고 있어 이를 뒤집기에 역부족이므로 차라리 불명예스런 법정 출두 장면이 언론을 통해 공표되는 일만큼은 피하자는 계산이라는 것이다. /연합뉴스

“결선 투표서라도 여수 꼭 지지를”

헝가리 방문 한덕수 총리 페렌츠 총리 회담 협조 당부

헝가리를 방문중인 한덕수 총리는 18일 쥘라치니 페렌츠 헝가리 총리와 회담을 갖고 2012 세계박람회 여수 유치와 관련, 헝가리 정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낮 헝가리 국회의사당에서 페렌츠 총리와 단독 및 확대 회담을 갖고 여수박람회가 헝가리와 같은 내륙국가에도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특히 헝가리 기업의 아시아 진출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점을 설명하며 지지를 요청했다.

정부는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등 중부유럽 3국이 여수의 경쟁상대인 폴란드와 함께 지난 91년 창설된 우호협력체인 '비셰그라드' 협력체를 형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보다 적극적인 유치의지를 펴는 한편 여의치 않을 경우 2차 결선 투표에서 여수 유치를 지지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와 페렌츠 총리는 또 양국간 통상·투자 협력강화와 헝가리 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투자환경개선 등 실질협력 증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한편 한 총리는 지난 17일 환경보호 없이 지속적 발전을 누릴 수 없다는 인식 하에 한국이 환경보호 노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HT)이 18일 보도했다.

IHT는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2012년 여수박람회 유치 외교를 벌이고 있는 한 총리와와의 인터뷰 기사를 통해 박람회 유치를 통한 한국의 환경정책 비전과 남북 정상회담 전망 등을 개괄적으로 소개했다.

한 총리는 인터뷰에서 서방 국가들의 우려를 사고 있는 중국의 환경오염 문제와 관련, "교토의정서의 유에 시한이 만료되는 2012년 이후 중국의 환경보호 정책이 보다 분명해질 것"이라고 전망하며 "여수박람회 유치는 아시아에서 분명한 환경보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총리는 19일부터 노르웨이를 방문, 여수박람회 유치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누가 공정위 믿고 신고 하겠나”

검찰, 공정위 담합 자진 신고 자료 압수...업체들 반발

검찰이 건설업체들의 입찰담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상 처음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보유한 업체들의 자진신고 자료를 압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는 공정위는 자진신고 감면제도와 비밀 유지 규정에 따라 해당 업체를 고발하지 않고 검찰에 대한 자료 제출도 거부했으나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동원해 자료를 강제로 압수했다.

이에 대해 기업들은 "비밀유지와 제재감면이 보장되지 않다면 누가 담합했다는 사실을 자

수하겠나"며 반발하고 있어 담합 자진신고 업체에 관한 비밀유지 논란이 제기되면서 자진신고 위축으로 향후 담합 적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 검찰이 공정위를 압수수색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어서 그동안 전속고발권 도입 등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어온 양측이 다시 해묵은 감정 싸움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 입찰담합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은 지난날 공정위를 방문해 영장을 제시하고 입찰제출 형식으로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공정위에 지하철 7호선 입찰담합 조사관련 서류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지난 7월 발표한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 입찰 담합 건에 대한 제반 자료를 요구했다.

제계는 공정위가 제재를 감면하고 비밀을 보장한다는 전제하에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해왔으나 관련 정보가 검찰에 넘겨진다면 누가 자진신고를 하겠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연합뉴스

정윤재 前청와대비서관

이르면 오늘중 구속영장

정윤재 전 청와대비서관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는 부산지검은 그를 상대로 세부조사 무마 개입여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혐의가 확인되는대로 이르면 19일 중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8일 오전 출두한 정 전 비서관을 상대로 "청와대 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올해 초 그에게 수천만원을 전달했다"는 건설업자 김상진(42)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금액액수와 전달받은 시기 등에 대해 강도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또 정 전 비서관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하게 된 것은 김씨의 진술이 결정적인 단서가 됐지만 계좌추적 등 자금흐름을 조사에서도 증거를 함께 포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마음과 마음을 따뜻하게 이어주는 - 산매산복분자교

산매 (Sanmae) brand products advertisement featuring various bottles and gift boxes.